

2010년 청년을 위한 위기탈출 전략

2010.2.01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청년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헌법상의 권리
2. 청년의 진취성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3. 대학생에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중간지대의 청년
4. 4가지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을 깨야 현실이 바로 보인다.
5. 청년의 부채와 고용문제는 곧 전체 국민의 문제이다.
6. 열 가운데 아홉이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다.



<http://saesayon.org>

요약

우리나라는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이지 시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교육과 노동 역시 헌법에 의해 명문화된 국민의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개인적 책임아래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과 직장인 사이의 광범한 중간지대, 여기에 한국 청년이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구획이 정확히 그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가 빈약한 기초 위에 2010년 한국 청년이 서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사회에 안착할 때까지 사회적으로 확립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개별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 개별적 선택에 따라 다양한 굴절 경로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는 청년들을 기본에서 노동자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노동자와는 다른 보다 확장된 노동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채 증가와 고용 축소는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사실 부채를 늘리면서 부채에 의한 소비를 조장하고 반대로 고용을 불안하게 하여 노동 비용을 줄여온 경제를 일컬어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금융화로 인한 차입경제라고 부르고 노동유연화를 기반으로 한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들의 늘어가는 빚과 취업난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심지어는 청년만의 문제도 아니다. 열 명 가운데 한 두 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그 당사자 개인의 문제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열 명 가운데 여덟, 아홉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집단의 문제이며, 곧 사회적 문제이다.

1. 청년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헌법상의 권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8년 5월과 6월 청계광장과 광화문을 덮었던 촛불항쟁에서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이 정부에게 확인시켜주려 했던 헌법 1조 2항이다. 최종적인 주권자가 권력행사를 하는 행정부나 국회가 아닌 국민이고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라고 단지 위임해주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다시 정치권력에게 좀 더 구체적인 두 가지 헌법조문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첫째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31조 1항이다. 여기에서 능력이라 함은 당연히 학습 능력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 받을 학생의 학습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불할 능력, 매년 1000만 원 대의 등록금을 지불할 경제력으로 변질 되었다.

또 하나의 헌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헌법 32조 1항이다. 우리 헌법은 취업 문제를 순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국민의 핵심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는 곧 국가의 의무가 된다. 국가가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적절한 임금을 받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이지 시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교육과 노동 역시 헌법에 의해 명문화된 국민의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개인적 책임아래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년의 진취성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최근 기성세대 일각에서는 경제 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들의 안정 회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청년들의 도전 정신과 진취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언술로 도전 정신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 환경에서 그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방안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주장하는 바는 ‘눈높이를 낮

추어 취업하라'는 것이다. 눈높이를 낮추면서 어떻게 진취적이 될 수 있겠는가. 적극적 도전 정신과 과감한 실험을 요구하는 것과 눈높이를 낮추라는 요구는 일반적으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상을 높이 갖고 있으면서 시작은 매우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부터 출발 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과 같은 불안한 저임금 일자리와 정규직의 전문적 일자리 사이에 노동시장의 장벽이 없어야만 성립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현재 매우 분절된 구조다. 임시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임시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규직, 전문적으로 도약할 길은 매우 좁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진취성과 도전 정신을 요구하면서 혁신적인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창업' 하라는 안내를 하기도 한다. 이 또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산업 지형을 무시한 주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과도하게 팽창한 '생계형 창업'은 이미 2005년을 정점으로 점포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스스로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다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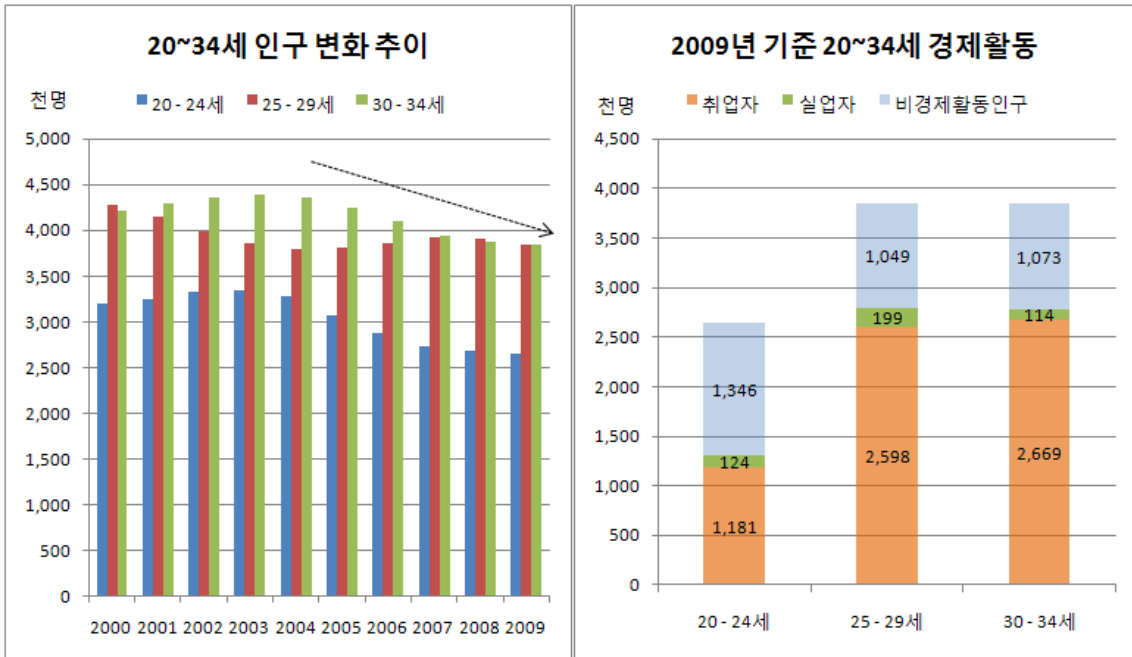
현재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과 안전망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 각자에게 진취성과 도전 정신을 말할 단계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청년들 스스로 적극적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3. 대학생에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중간지대의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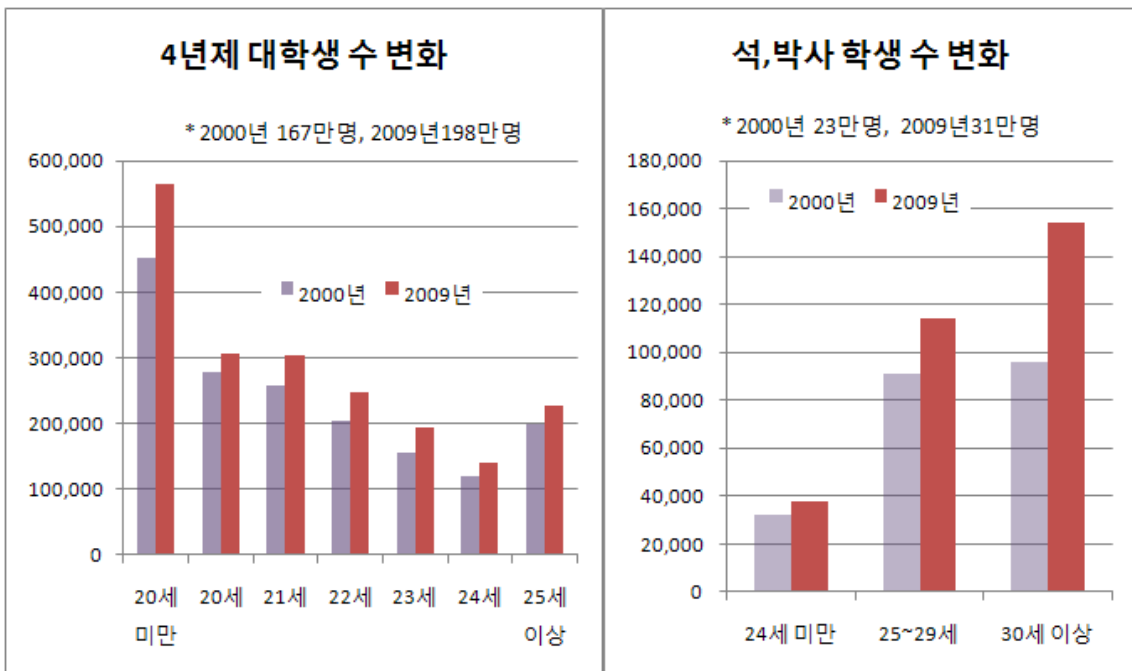
사실 최근에는 전 사회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화두로 되고 있지만, 정작 청년에 대한 경제적 실태나 취업 이동 경로 등에 대한 마땅한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태 파악이 부실하니 대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선차적 과제는 바로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경제활동 차원에서 청년 범주는 OECD 기준으로 보면 만 15세~24세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고등학생 가운데 84퍼센트가 대학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은 대부분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20대 청년 남성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경제활동이 지체된다. 여기에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학이 빈번하고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취업 준비를 감안한 평균 최초취업 연령이 이미 27~29세까지 높아져 버렸기 때문

에 경제적 차원에서의 청년 범주를 20~34세로 확장 시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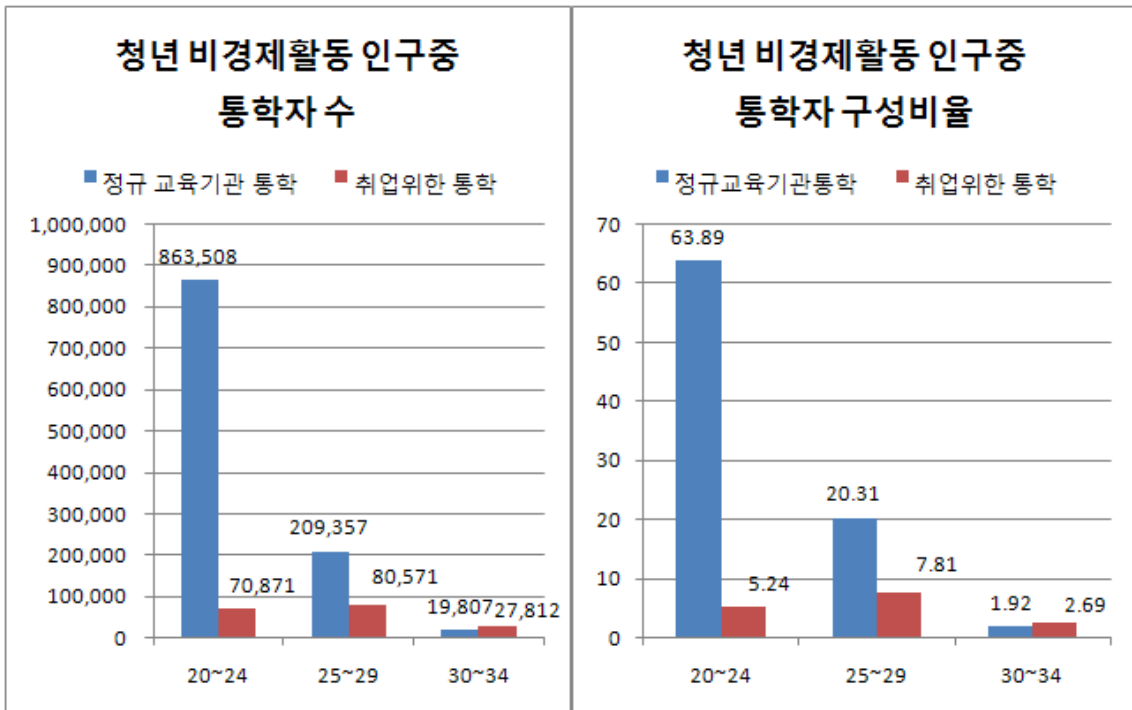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09년 기준으로 20세~34세 사이의 한국 청년 인구는 대략 100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수자다. 그런데 저 출산의 여파로 청년 인구 자체가 2003~2004년을 정점으로 하여 청년 전체 연령대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 가운데 300만 대학생으로 알려진 학생은 18세~22세까지 각 연령별로 25~30

만 명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20대 후반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군 입대뿐 아니라 휴학, 대학원 진학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 청년 인구가 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률 상승으로 대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대학원 이상으로 진학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학업을 위해 통학을 하는 수자는 20대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100만 명 내외이다. 그러다 보니 공식적인 신분은 학생이면서도 군 복무 중이거나 휴학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준비 등으로 하는 수자도 폭넓게 퍼져 있고, 졸업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1000만 청년 인구 가운데 640만 취업자 내부 구성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 취업자 360만 명 역시 대단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생이라는 규정과 취업준비생이라는 규정, 실업자라는 규정, 또는 취업자라는 규정을 동시에 혼합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학생과 직장인 사이의 광범한 중간지대, 여기에 한국 청년이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구획이 정확히 그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가 빈약한 기초위에 2010년 한국 청년이 서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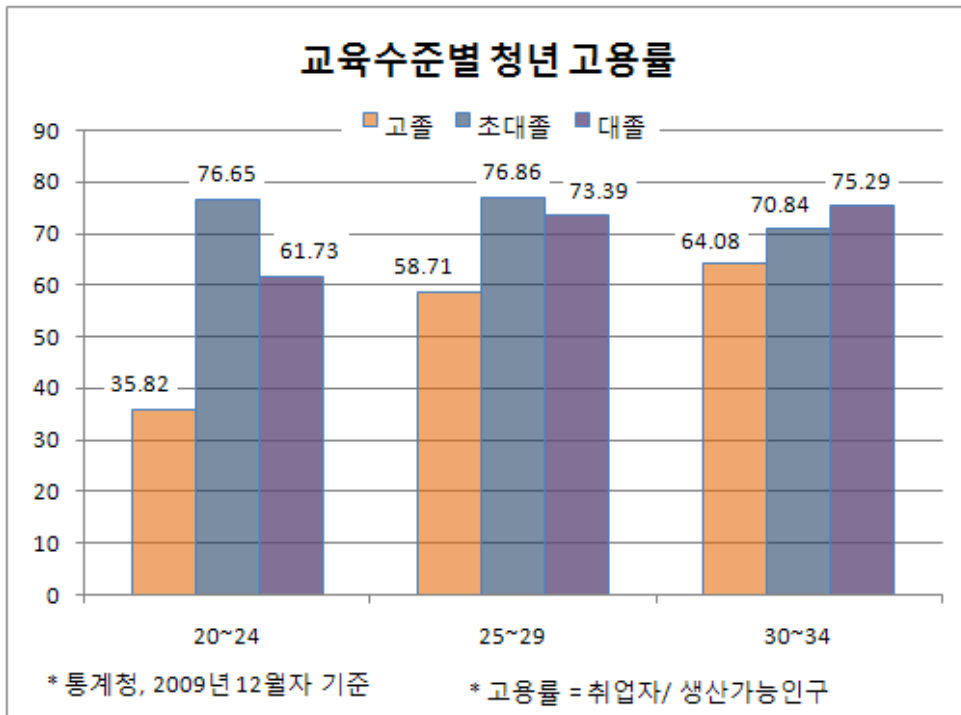
왜 그럴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사회에 안착할 때까지 사회적으로 확립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개별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 개별적 선택에 따라 다양

한 굴절 경로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는 청년들을 기본에서 노동자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노동자와는 다른 보다 확장된 노동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 4가지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을 깨야 현실이 바로 보인다.

청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에 기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청년들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넣었다. 때문에 개인 탓에 근거한 청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것들이 허다하다. 그 중 대표적인 4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눈높이가 높아서 사회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주로 대학생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진실이 되려면 대학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훨씬 사회진출이 원활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새삼스럽게 눈높이를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는 20~34세 전 연령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용률(취업자/인구)이 대학 졸업생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주장은, 대학 졸업생들이 ‘너무 눈높이를 낮추어서’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기회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낮은 일자리라도 찾기 위해 무리하게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둘째로, 20세기 말 이후 정보통신을 핵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된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이 점점 더 가속화되었고 여기에서 청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념 역시 고용불안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노동 유연화만큼 깨야할 신화에 불과하다. 만약 노동 유연화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발전이 고용 없는 성장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20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자동화와 기술적 혁신이 쉬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주의 수백 년 역사를 통하여 고용상황은 체계적으로 악화 되어야 했다.

그러나 20세기의 엄청난 인구팽창을 흡수할 정도로 그 동안 고용이 확대되어왔다는 것을 현실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특별히 신자유주의에서 고용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도 확인해주고 있다. 문제는 생산력과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금융 수익창출에 몰두한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이 인위적으로 확대된 데 있다. 또한 이런 방식의 수익창출을 사적기업이 추구하도록 국가가 방조했기 때문이다.

셋째로, 주로 대기업에서의 노동조합에 의한 고용 경직성이 청년들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취업난의 주범이라는 소리다. 주로 기업들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황당한 주장이다. 도대체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내주고 실업자 신세로 떨어져야 한단 말인가. 기업이야 총고용의 증가 없이 임금을 많이 줘야 하는 중장년 경력자보다는 월급을 적게 줘도 되는 청년을 고용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혀 없다.

넷째로, 청년 취업난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장도 짚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청년 고용문제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내재된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청년들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계층과는 달리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여 훨씬 강도 높은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의 사회진출 어려움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버젓이 유포되면서 정부와 기성세대는 청년에 대해 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청년은 이런 상식

의 그늘 아래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환치시키며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주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잘못된 상식을 깨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는데서 시작된다.

5. 청년의 절박한 부채와 고용문제는 곧 전체 국민의 문제이다.

청년의 경제적 삶과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를 꼽자면 그것은 단연 등록금 문제로 대변되는 ‘부채’ 문제와 취업과 관련된 ‘고용’문제이다. 청년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기원으로 해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학 졸업생 10명 중 7명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금액이 11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빚을 진 이유 중 80%는 등록금 때문이었다. 이들 부채가 1~2년 안에 상환되기 쉽지 않다면 20대 이상 청년의 다수가 부채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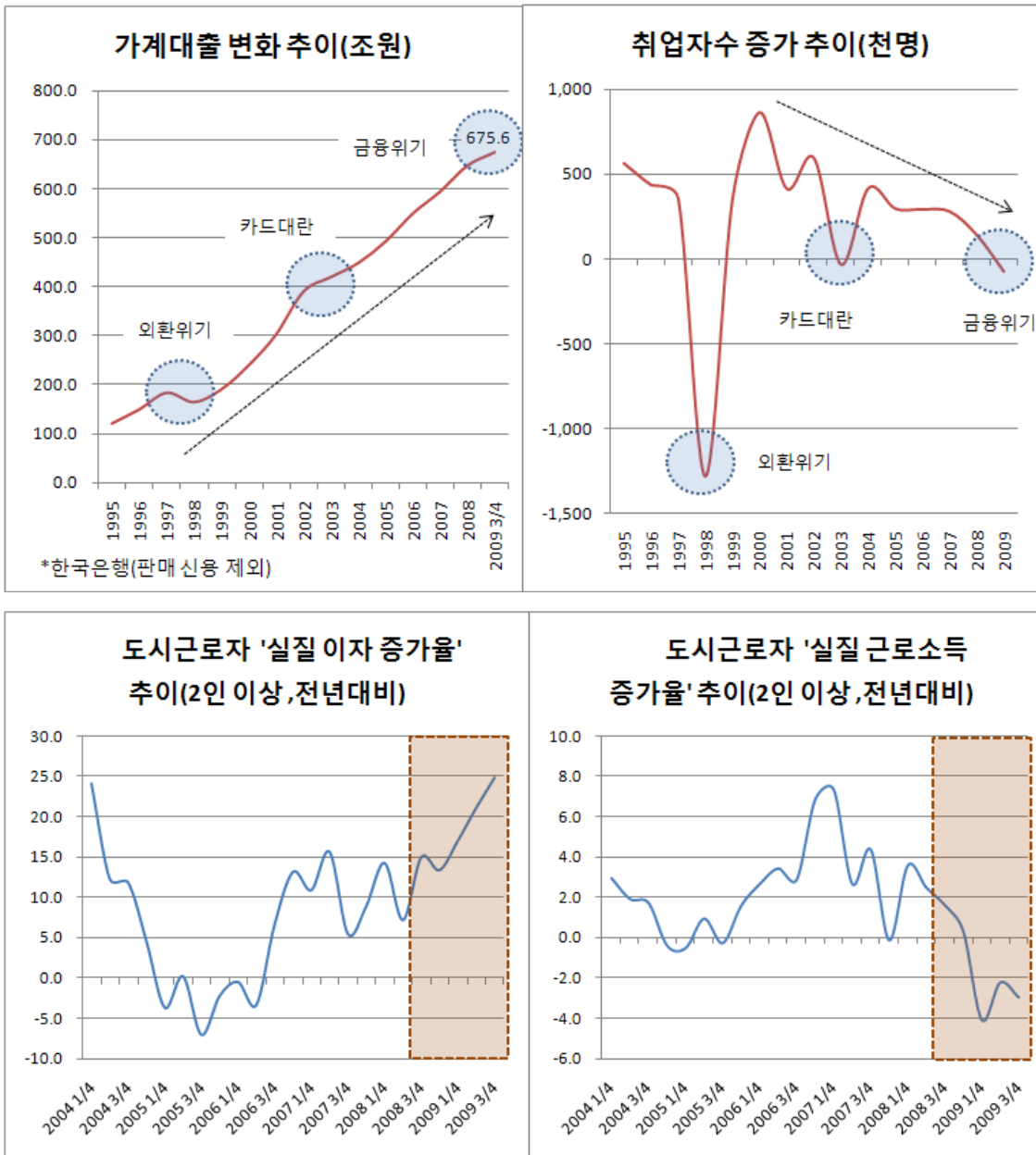
그러나 부채 증가와 고용 축소는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사실 부채를 늘리면서 부채에 의한 소비를 조장하고 반대로 고용을 불안하게 하여 노동 비용을 줄여온 경제를 일컬어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금융화로 인한 차입경제라고 부르고 노동유연화를 기반으로 한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우리 가계는 지난 15년 동안 거의 6배에 이르는 부채 증가를 기록했고 외환위기, 카드 대란,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에 다소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멈추지 않고 팽창했으며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다. 2010년 한국경제의 최대의 뇌관을 가계 부채라고 지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들만 빚이 늘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일자리는 외환위기 이후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후, 기저효과로 잠시 팽창을 하다가 2000대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어왔다.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경제 성장률 1%당 6만 명 내외로 늘어나던 일자리는 이제는 3~4만 명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청년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아래에서 전반적 부채 증가와 일자리 감소라고 하는 사회적인 대세에서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보았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도 가장 취약했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문제가 표출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청년들이 청년의 문제를 단순한 세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인

식하고 사회구조적 인식을 튼튼히 하여 국민들과의 호흡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6. 열 가운데 아홉이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이제 청년들의 늘어가는 빚과 취업난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심지어는 청년만의 문제도 아니다. 열 명 가운데 한 두 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그 당사자 개인의 문제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열 명 가운데 여덟, 아홉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집단의 문제이며, 곧 사회적 문제이다.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집단의 문제라면 집단적으로 함께 풀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풀어야만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청년 앞에 있는 부채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함께 단합하여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어떻게 풀 것인가. 우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공통성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청년들의 현재적 처지가 표현되고 있지만 절대 다수가 부채와 고용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같은 처지’라는 존재론적 동일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지가 같으면 생각도 같은 것이며 생각이 같아야 행동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존재론적 처지의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함께 절망’하는 것 말고는 나올 수 있는 답이 없다. 현재의 상태가 절대로 변하지 않은 불가피한 상태도 아니고 영원불멸의 상태도 아니라는 확신, 즉 현실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된 미래가 가능하다는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변화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변화를 모색하는 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존재론적 처지를 서로 공유하여 동질감을 느끼고, 미래의 변화를 함께 확신한다면, 방법론 적인 구체적 해결 방안은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